

“해외주재원들 4~5억원 횡령” 폭로

전(前) 브뤼셀 지부장 증거 제시 협회, “조정수당은 관행상 직원들 몫” 해명

무역협회, 해외주재원 세금환급금 파문

무역협회(회장 김재철·협회) 해외근무자 조정수당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브뤼셀 조한권 전 지부장을 99년 10월11일 직위해제하자 조씨는 “전임 해외 근무자들이 회사에서 부담해 온 조정수당을 반납하지 않고 횡령했다”며 김재철 회장과 신 모 임원 등 12명을 지난해 11월18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투서는 세금환급 지시에 대한 보복행위”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 9월3일과 7일 브뤼셀 지부에 근무하는 강 모 과장과 정 모 직원이 ‘조 지부장이 업무활동비를 유용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김재철 회장에게 보냈다. 협회는 다음날 조 지부장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위는 조 지부장을 직위면직시키고 부정하게 사용한 1천7백38만원을 반납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조 지부장은 “지난해 7월경 전임자들이 세금 환급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본부에 철저히 보고하고 협회 계좌에 환급금을 규정대로 입금할 것을 브뤼셀 직원들에게 지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투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 지부장은 김재철 회장에게 1992년 이후 브뤼셀에서 근무했던 12명이 해외조정수당을 횡령했다며 현지 회계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조 지부장은 벨기에 재무성을 통해 확인한

일부 자료를 근거로 “신 모 상무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천3백여만원, 염 모 상무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3천9백여만원을, 김 모씨는 92년부터 3년간 4천1백여만원을, 투서한 강 모 과장은 7백여만원 등 브뤼셀 근무자 10여명이 모두 4억~5억원 이상을 협회에 환급하지 않고 개인이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1월 조 지부장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지부장을 직위해제하는 선에서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던 협회는 “조정수당은 ‘급여’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2월9일자로 검찰에 전달했다. 조정수당은 관행상 개인들 몫이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불문, 앞으로 행긴다

협회 임동철 전 홍보실장은 “지금까지 조정수당 환급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돼 실행되지 않았다.

올 2월부터는 조정수당에 대한 세금 환급분을 협회에서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금까지의 일은 눈감아주고 앞으로 잘 행하겠다”는 얘기다.

협회 노동조합도 “협회가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조치를 안 하는데, 노조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ASEM 회의가 열리는 무역협회. 세금환급금과 공사현장 잠음 등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조씨는 “자료 확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홍콩이나 동경, 북경지부 근무자들이 세금환급금을 협회에 입금한 사례가 있다. 투명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규정 제6조(조정수당)에는 “해외 지부장은 해외근무자의 급여와 관련된 주재국의 제세공과금 등을 감안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당해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세무관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첨부 지급내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정수당 문제로 오히려 벼랑 끝에 내몰린 조씨는 올 1월20일 청와대에 진정을 했다.

진정 내용은 △조정수당에 대한 세금횡령 외에도 △김재철 회장 취임 후 협회자금 1천억원을 조성,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증권 MMF(채권 및 단기 유동성 상품)에 예금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ASEM 건설현장의 중장비도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일렌탈(주)에서 임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측은 “김 회장 취임 전부터 동원증권과 거래하고 있었으며 액수도 2백6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중장비 가운데 동일렌탈에서 임대한 것은 극히 일부이며, 임대주체도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협회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의 모 직원은 “동원증권 예금이 문제가 되자 조금씩 줄었다. 실제 작년 11월 예금액은 5백68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2월24일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무혐의처리로 사건을 종결했다.

‘청와대에 접수한 진정서가 다시 협회로’

조씨를 도와준 협회의 한 모 과장도 자신사표를 냈다. 한 과장은 브뤼셀 지부 각종서류 검토와 고소장 심부름을 해줬고,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대신 서명을 했다가 문제가 됐다. 이 진정서는 곧바로 협회로 들어갔고 서명날인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협회가 한 과장을 지목했던 것이다.

협회의 한 직원은 “조정수당에 대한 협회의 형평성을 잃은 애매모호한 입장정리와 검찰수사 결과는 납득이 안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협회 인터넷 게시판에 ‘브뤼셀 사건을 보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은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거, 과지급된 돈은 환수하고 해당자를 의법조치할 것 △징계위원회는 해외근무를 했던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노사 공동의 추천자로 할 것 △객관적인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 등을 주장,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평소 김재철 회장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운영을 강조해왔다. 법정으로 번진 조정수당 사건과 ASEM 건설현장의 잠음, 지하금으로 불리는 매장분양 건을 협회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전오성 기자 hsjeon@naeil.com

“집단비리 감추려는 음모였다”

과거 대부분 직원들 세금 조작으로 이득 ... 현지에선 비웃음거리

브뤼셀지부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여직원 로자노 상팔이 1999년 10월4일 김재철 회장 앞으로 보낸 편지를 입수했다. 현지 여직원이 보고 느낀 해외지부 상황과 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요약해 실는다. 이 편지를 쓴 여직원은 직위해제되었다.

존경하는 회장님, 오랜 생각 끝에 이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요청도 받은 바 없고 12년 동안 근무한 직원으로 오직 제 양심에 따라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저를 놀라게 하는 일은 조 지부장과 조정수당 건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향한 비리 주장에 대해 조 지부장이 소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의 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무모한 행위에 이토록 많은 정력을 쏟아붓는 일을 본적이 없습니다. ... 과거 지부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공개되어도 문제가 없는 일만 드러내고 불리할 수도 있는 일은 숨기려는 목적으로 모두가 한데 뭉쳐 한

사람을 공격하기는 아주 수월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협회에서 온 변호사와 감사관에게 심문을 받을 때 지부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개인적인 세금환급문제, 강 과장과 미세스 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세금환급으로 취하게 되는 개인적인 이득에 관해 협회본부가 알게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부를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받는 세금환급에 대해 미세스 정에게 의존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4개월 혹은 5개월에 대

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12개월에 대한 세금을 환급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 지부에서 1년에 40만에서 50만 벨기에 프랑이라고 들었습니다.

... 조 지부장의 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서류들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번역비 연료비 등 협회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지부의 모든 상황이 정상적이고 음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협회는 이번 사건에서 아주 비판받을만한 절차로 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한국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피고와 원고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가 무역협회에 계속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를 바라며 회장님에 대한 저의 깊은 존경심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로자노 상팔)